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법제사법위원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등 추가〉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539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 ..... | 2  |
| 2. 개정안의 내용 .....                     | 6  |
|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                  | 8  |
| 4. 관계기관 의견 .....                     | 1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상범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2.
3. 회 부 일 : 2025. 4. 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처럼 형사와 민사사건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제3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

##### 가.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함)에 따른 배상명령제도는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1981. 3. 1.에 도입된 제도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임.<sup>1)</sup>

즉,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심판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생길 수 있는 형사재판과의 모순을 방지하는 데에 제도

---

1) 소촉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적 취지가 있음.<sup>2)</sup> 특히,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고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한편,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sup>3)</sup>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sup>4)</sup>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

현행법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로는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제25조제1항제1호), 그리고 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

---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4, p.314.

3) **소추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 ⑦ (생략)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소추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수의 죄(제25조제1항제3호)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상 특수한 범죄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상의 특수한 범죄유형(제25조제1항제2호) 등이 있음.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위에 규정된 죄 및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제25조제2항).

### < 배상명령 대상 범죄 >

| 근거법률                | 범죄유형                                                                                                                                                                                                                                                                                                                                                                                                                                                                             |
|---------------------|----------------------------------------------------------------------------------------------------------------------------------------------------------------------------------------------------------------------------------------------------------------------------------------------------------------------------------------------------------------------------------------------------------------------------------------------------------------------------------|
| 형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죄(제257조제1항)</li> <li>- 중상해죄(제258조제1항 및 제2항)</li> <li>- 특수상해(제258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li> <li>- 상해치사죄(제259조제1항)</li> <li>- 폭행치사상죄(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li> <li>-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li> <li>-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li> <li>-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li> <li>-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li> <li>- 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li> <li>- 손괴의 죄(제42장)</li> <li>- 위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li> </ul>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li> <li>-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li> <li>-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li> <li>-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li> <li>-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미수죄(제14조 및 제15조)</li> </ul>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li> <li>-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li> </ul>                                                                                                                                                                                                                                                                                                                                                                         |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한정한 취지는 형사재판의 본질, 신속한 형사재판의 원칙<sup>5)</sup>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즉,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에 처하는 재판이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될 경우 형사재판이 지연되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손해 확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형사재판이 민사재판처럼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일정한 범죄로 한정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확대되고 있는데, 소속법 제정 당시에는 성범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9. 11. 2. 법 개정으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하게 되었고(2010. 5. 3. 시행), 2012. 1. 17.에는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성범죄가 추가되어 시행된 바 있음.

## 다. 배상의 범위

현행법상 배상명령을 통한 배상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

5)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와 치료비 손해(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임.<sup>6)</sup>

배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주된 목적을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복잡한 손해 산정 문제는 민사재판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조화롭게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2.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sup>7)</sup>에 규정된 죄 중 임금체불 등에 관한 범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sup>8)</sup>에 규정된 죄(퇴직

---

6) 소추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7)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금 미지급)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제25조(배상명령) ① -----<br>-----<br>-----<br>-----<br>-----<br>-----<br>-----<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3.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규정된 죄(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죄 |
| 3. (생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 ② ③ (생략)                                                                                                                                                                                | ② ③ (현행과 같음)                                                                                                                  |

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에서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하려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규정된 죄는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범죄로 같은 법의 금품 청산(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제44조·제44조의2), 휴업수당(제46조), 임금 정산(제51조의3), 가산수당(제52조제2항제2호)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제56조)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임.

#### <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
|-----------------------------------------------------------------------------------------------------------------------------------------------------------------------------------------------------------------------------------------------------------------------------------------------------------------------------------------------------------------------------------------------------------------------------------------------------------------------------------------------------------------------------------------------------------------------------------------------------------------------------------------------------------------------------------------------------------------------------------------------------------------------------------------------------------------------------------------------------------------------------------------------------------------------------------------------------------------------------------------------------------------------------------------------------------------------------------------------------------------------------------------------------------------------------|
| <p><b>제46조(휴업수당)</b> ① <u>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u>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u>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u>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b>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b>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u>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p> <p><b>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b>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2. <u>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u>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b> ① 사용자는 <u>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u>휴일근로</u>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1. <u>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u></p> <p>2. <u>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u></p> <p>③ 사용자는 <u>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p> |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죄는 퇴직금 지급 조항(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해당 조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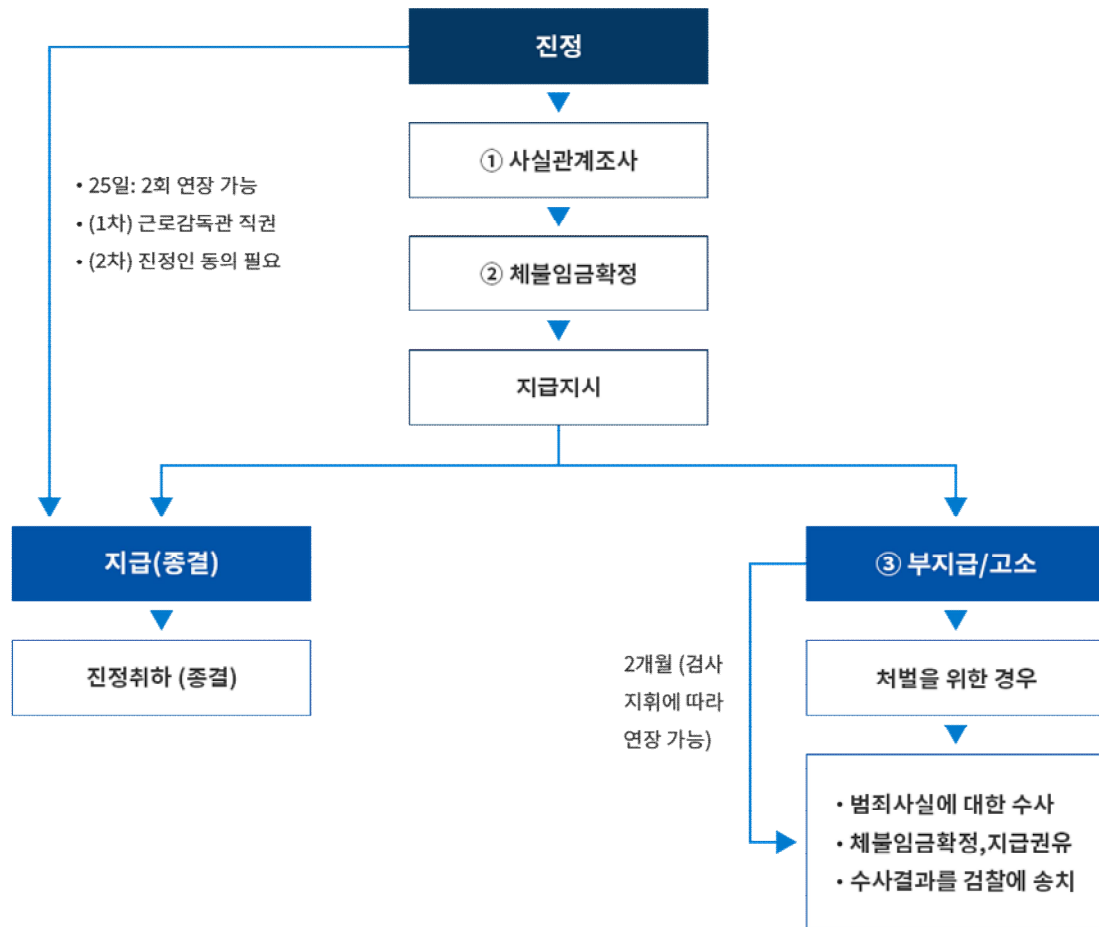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滯拂) 관련 범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하여 민사소송절차 없이 형사재판에서 근로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대다수의 임금 등 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체불 관련 범죄에 배상명령을 허용하더라도 체불 금액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지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임.

### <체불임금사건 처리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임금 등 체불 범죄의 심각성과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및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4.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배상명령제도 도입의 취지 및 필요성,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빠른 피해회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배상명령 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기각된 경우, 배상명령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임금체불 사건을 배상명령 대상으로 추가하여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체불임금·퇴직금은 사업주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고 피해액 특정도 비교적 용이하므로,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하기에 적합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61 |